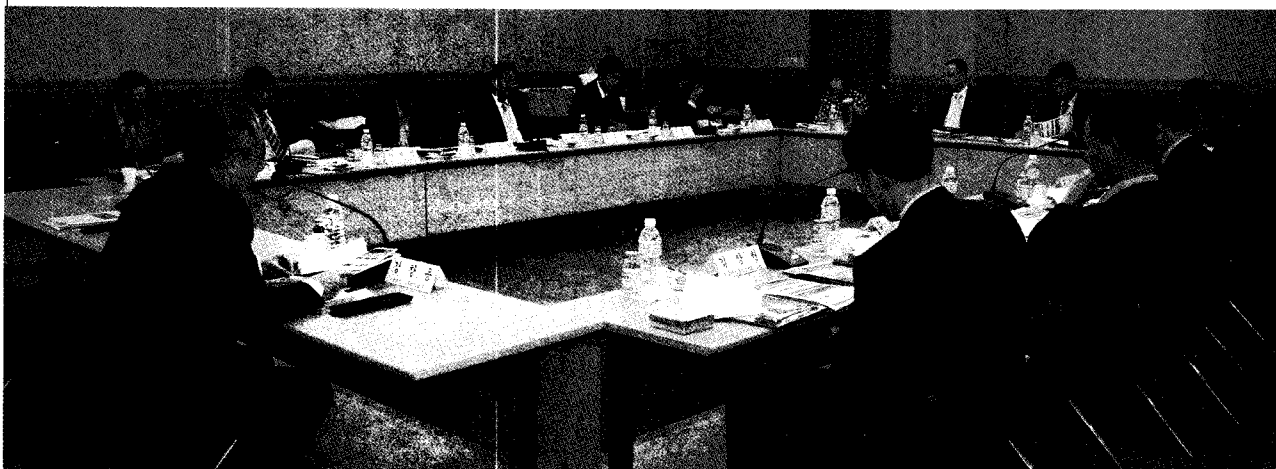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법규체계 미흡·일관성 부재’ 혼란 야기 ‘관련 규정 분산’도 문제



사용되는 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단위 면적당 사용량 등은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다. 또 가격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만족도가 높다.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농업인의 대처는 소극적이며 현행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홍보부-

친환경농자재란 기존의 관행농업에서 사용된 비료, 화학농약 대신에 친환경농업에서 사용되는 농자재로서 대표적인 것들로 유기질비료, 퇴비, 유기상토, 생물농약, 천적, 미생물제제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자재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고 법률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이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으나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은 미진했다.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필수적인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친환경농자재는 기존의 각 연구마다 정의와 분류 범위가 다르고, 법적 근거도 친환경농자재의 종류별로 다방면에 분산되어 있어 비체계적이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기본인 「2006~2010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내용에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제도와 세부 사업들은 범위가 제한적이고,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내에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내용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친환경농자재의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적 이용,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도강화 통해 농업인에 신뢰주어야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그리고 농가의 이용 측면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조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측면에서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적절한 품질 규격, 표시 등에 대한 기준 미흡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 저품질 자재 공급 △연구 개발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 미흡 △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이다. 이밖에 친환경농자재 종류에 따라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및 이에 따른 원료가격의 불안정성, 사용 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 곤

란 등의 문제점도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유통 측면에서 나타난 주된 문제점으로는 △정보 전달의 왜곡 가능성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수준 미흡 △효과와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 △사용방법 등 표시 상태에 대한 불만족 △판매대금 회수의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 등이다.

농업인의 친환경농자재의 이용 실태와 애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조사된 친환경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며, 학력도 모두 고등학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주된 동기는 소득과 시장성이며, 이것은 향후 친환경농업 규모 증감 계획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친환경농자재는 퇴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제, 목초액 등이다. △친환경농업은 보통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자재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도 인근 농가로부터 주로 제공받는다(34.7%). △관련된 정보나 지식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1.6%), 교육 내용과 시기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자재는 관련된 단체 및 조직을 통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44.5%)와 인근 시판상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34.9%)가 대부분이다. △사용되는 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단위 면적당 사용량 등은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

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선택과 이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35.3%)과 효과(23.4%)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농업인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와 같은 현행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제도적인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주된 문제점은 크게 관리 체계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로 구분된다.

친환경농자재 관련 제도의 관리 체계상으로는 △친환경농자재 관리 범규의 체계가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어 생산, 유통, 이용의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과 △친환경농자재에 관련된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점이다.

관리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에 대한 문제와 개별법에 대한 문제로 세분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의 경우, △현재 농촌진흥청의 관리체계 하에서 민간 관리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된다. △상위법에 개념 규정도 없이 하위법인 목록공시제에 의해 친환경농자재로의 등록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통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목록공시제는 서류심사 기반이며 사후관리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 개별법 측면에서의 문제로는 △친환경농자재에 적합한 표시제도의 부재 △친환경농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등이 있다.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는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비체계적이다.

한편 외국의 제도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

요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CODEX와 IFOAM의 경우 유기농업의 원칙과 방법, 사용 가능한 자재 및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국은 친환경농업과 친환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추이**

단위: 톤, (%)

구 분	2000	2001	2005	2006	2007
유기농산물	6,538 (18.5)	10,670 (12.2)	76,591 (9.5)	102,248 (9.0)	107,179 (6.0)
무농약농산물	15,694 (44.3)	32,274 (37.0)	242,068 (30.0)	320,309 (28.2)	443,989 (24.9)
저농약농산물	13,174 (37.2)	44,334 (50.8)	487,588 (60.5)	712,380 (62.8)	1,234,706 (69.1)
계	35,406 (100.0)	87,279 (100.0)	806,247 (100.0)	1,134,937 (100.0)	1,785,874 (100.0)

註) 전환기는 유기에 포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경농자재에 대한 법, 규정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물질과 자재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법에서 규정된 자재와 물질로 생산된 친환경농자재 제품의 유기농업 적합성 여부의 검토를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물질 기준에 따라 독일의 법 내에서 농자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신고센터 설치 등 프로그램 도입 고려해야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향후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정책적인 개선 방향으로는 먼저 친환경농자재의 개념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정립해야 하며, 정책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측면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별로 적절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농자재의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관리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 △집행시 상충되는 정책들간의 조정 △민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관리수준별 차등 지원 △친환경농자재 표시제 실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와 관련된 조직 및 단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원료 수입창구의 일원화 강구 △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 업무를 위임 및 시행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개별기업은 친환경농자재의 생산과 유통의 공급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당면 문제 개선의 적극적인 참여 △전문인력의 육성과 제품의 품질 개선 노력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유통업체는 생산된 친환경농자재를 농업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친환경농자재 전문매장의 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자재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적 이용을 돕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지식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친환경농자재의 가격과 효과에 대한 관리 강화 △이용 피해 및 사고 사례 신고센터 설치 등의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Y

※본 자료는 지난 3월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설명회 자료집을 요약, 정리한 것임.